

## 기득권자들만의 논의

안 주 업\*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역시 너무 어려운 일인가보다.

우리가 예수나 석가모니를 여전히 신앙으로 받드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것 모두 버리고 마침내는 삶까지 송두리째 ‘나’ 아닌 ‘남’을 위해 내어놓았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판에도 한 성인이 있다. 1970년 청계천 바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자신을 불사른 청년 전태일이 우리에게 있다.

그 후 30여년이 지났다. 현재 노동자들이 누리는 근로조건은 평균적으로 보면, 당시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좋아진 것이 사실이다. 당시 ‘평균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일 13시간, ‘1개월 336시간(전태일 일기 중)에 이르던 노동시간은 주5일제 도입 등 월 205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사회보험이 속속 도입되어 근로자 중 52%가 모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58%가 법정퇴직금 등 주요 부가급부를 받고 있다.

평균적 근로조건이 향상된 이면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그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세계화와 무한경쟁 속에 진행된 전지구적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는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라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켰다. 2001년 29%에 이르던 비정규근로 비중은 2005년 37%로 상승하였으며, 거기에 더하여 19%를 상회하는 ‘정규근로자처럼 일하지만 비정규근로자로 처우받는’ 차별받는 근로자(또는 ‘취약근로자’)가 있다.

정규-비정규근로의 근로조건은 가히 엄청난 현실을 보여준다. 실질적 정규근로자의 한달 임금 220만원, 비정규근로자나 차별받는 근로자는 반토막인 112만원과 113만원이다. 사업체 규모까지 고려하면 ‘시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대기업의 실질적 정규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67만원, 5인 미만 영세업체 비정규근로자는 79만원이며,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더욱 심각하다. 실질적 정규근로자 중 1.4%만 사회보험 접근금지, 비정규근로자나 차별받는 근로자 셋 중 하나는 사회보험에 전혀 접근금지, 정규-비정규근로간 엄청난 격차나 차별적 처우와 관련된 사례는 이루 다 들 수 없을 정도이며 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비정규근로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 경제위기 직후 2000년 양대 노총은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는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yahn@kli.re.kr).

‘비정규대책특위’를 구성, 법제도 개선방안을 2년이나 논의했으나 합의에는 미치지 못하여 ‘공익위원안’을 정부에 이송하였다. 그로부터 2년여 지난 2003년 11월에야 노동부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정부 내 관계부처 의견조율 등을 거치느라 여기에 1년을 더 보탠 2004년 9월에야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마침내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그리고는 원고마감을 최대한 연장하여 맞이한 황사 긴 노동절 아침까지 비정규근로 보호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온갖 정치적 논리 속에 표류하고 있다. 양대정당은 지난 2월 환노위 통과 후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약속하였지만 막판에 이를 뒤집고, 민주노동당은 법사위 상정 저지를 위한 무력행사를 벌였다. 한국노총은 최종안이 불만스럽지만 ‘이만이라도 통과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조이고 있고, 민주노총은 ‘비정규근로자를 양산하는 악법’ 구호를 외치며 비정규근로자와 연대한 입법저지투쟁 속에 법안처리가 ‘물 건너가는 것’을 내심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런 논의과정에서 과연 누가 비정규근로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주려고 하고 있는가? 비정규근로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지난하게 진행된 노사정위원회 논의에서는 대기업을 ‘대표’하는 자들의 볼멘소리만 들렸다. 정부 관계부처 협의 역시 왈자한 저자거리를 방불케 하더니 결국 정부안은 어정쩡한 모습으로 시장에 나타났다. 국회는 또 어떠한가? 국회 고유권한인 법안처리를 당리당락에 따라 미뤄오더니 막판에는 ‘사학법 재개정’을 이유로 법안처리를 기피하고 있다. 한 국회의원이 ‘양아치 집단도 아닌데...’라고 말했다 전해진다. 노동계는 어떤가? 민주노총은 모든 비정규근로자가 정규근로자처럼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양, 정규근로자마저도 비정규근로자로 만드는 법안으로 매도하는 한편, 이를 이용해 법안저지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비정규근로자가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자면 사용자, 특히 대기업 사용자와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근로 아닌 자’들이 ‘가진 것’ 중 일부를 내놓아야 한다. 노동계는 사용자를 탓하며 ‘모두 내놓아라’ 하고, 경영계는 정규근로자 과보호를 지적, ‘지나친 해고금지 규정을 없애라’ 한다. 사용자와 정규근로자가 평행선 위를 달리고 있을 때 비정규근로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사회는 그만 큼 병들어간다.

이제 조금이라도 가진 기득권자 모두는 가진 것 전혀 없는 비정규근로자를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 비정규근로자들이 들고 일어서기 전에, 특히 양대노총은 그러해야 한다. 그것이 청년 전태일이 30여년 전 자신을 불사른 이유다. 그러지 않는 한 공정한 사회와 노동의 미래는 없다. **KLI**